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第19回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5. 12. 15.

民族統一研究院

- 目 次 -

開 會 辭 李秉龍 ... 1

< 주제발표 및 토론 >

1. 1995년도 동북아정세 평가 및 전망 김국진 ... 5

○ 제1주제 토론요지 29

2. 북한 현황과 전망 이종석 ... 35

○ 제2주제 토론요지 65

3. 남북한관계 현황과 전망 조 민 ... 75

○ 제3주제 토론요지 111

회의일정 115

開 會 辭

多事多難했던 乙亥年이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한해 한반도 안팎의 情勢 推移와 南北韓 關係를 돌이켜 分析해보고 내년을 展望하기 위한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외부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탈냉전의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勢力關係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냉전구도에 기반하고 있는 한반도 安保構造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周邊 4國은 自國 利益中心의 對韓半島政策을 추진하면서도 '韓半島의 安定 및 現狀維持'에 대해서는 利害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러한 外的 與件의 변화와 더불어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權力構造 및 政策方向에 대내외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만, 김일성이 사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김정일 체제는 공식적으로 出帆하지 못하고 있으며 經濟難, 國際的 孤立, 食糧難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政策路線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김일성 遺訓統治와 思想教養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최대의 당면 목표인 체제유지에 집착하면서 對美關係 개선에만 집착하여 當局間 對話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에 올 한해에도 남북관계에는 이렇다할 進展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우리 政府는 종교인

및 문화예술인의 방북허용, 기업인의 방북조건 완화 등 非政治的 분야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交流·協力을 추진하고 人道主義的 차원에서 북한에 15만톤의 쌀을 無償으로 제공하는 등 ‘接觸을 통한 變化’ 기조하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與件 造成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북한에 대한 輕水爐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경수로 供給 契約을 위한 KEDO와 북한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鼓舞的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복잡한 現實을 감안하여 研究院에서는 한반도 周邊 및 北韓情勢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南北韓 關係를 개선하고 우리의 國益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변4국과의 關係를 再定立해 나갈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하고자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구원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됩니다만, 아무쪼록 금번 학술회의가 한해를 整理하고 내년의 주변정세와 남북한관계를 展望하는데 有益한 討論의 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12. 15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주제: 주변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 사회: 양성철(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발표: 김국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995년도 동북아정세 평가 및 전망”
- 토론: 신상진(국제연구실 연구위원)
전동진(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제2주제: 북한 현황과 전망

- 발표: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현황과 전망”
- 토론: 최수영(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교덕(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제3주제: 통일 및 대북정책

- 발표: 조 민(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남북한관계 현황과 전망”
- 토론: 김보현(북한문제전문가)
김학성(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1995년도 동북아정세 평가 및 전망

김 국 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995년도 東北亞情勢 評價 및 展望

金國振(外交安保研究院 教授)

< 목 차 >

- I. 1995년도 東北亞情勢 評價
- II. 東北亞 4強關係
- III. 綜合評價 및 1996년도 展望

I. 1995년도 東北亞情勢 評價

1990년도를 기점으로 「冷戰以後時代」(the post Cold-War era)의 6년째에 해당하는 1995년도 동북아정세는 地域安定·平和·繁榮의 관점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을 공히 나타냄.

1. 부정적 측면

(1) 地域 不確實性의 증대

- 제2차대전 이후 東北亞 地域의 주요 지역갈등으로 존속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와 대만문제(양안관계)가 불확실성과 긴장관계를 나타냄.
 - 對北 쌀지원과 관련, 3차(1995. 6~10)에 걸친 남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함은 물론 북한의 무장간첩 파견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
 - 미국의 이등휘 대만 총통에 대한 개인자격의 비자 발급(1995. 6)으로 빚어진 美·中國 갈등의 여파로 야기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을 일환으로 행해진 대만해 부근에서의 미사일 발사 연습으로 양안관계 긴장 고조
- 이등휘 대만 총통에 대한 비자 발급문제와 관련, 미·중 수교후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미·중 갈등의 야기 및 美·日 무역마찰의 심화 등 冷戰以後時代 美·日·中간 이른바 동북아 「新3角關係」의 갈등과 마찰로 인한 지역 불확실성이 증대함.

(2) 國內政治 不安要因의 지속

- 미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으로 對中國 및 對日本 관계는 물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겨냥한 제네바 핵합의 이행에도 큰 제약을 받음.
- 중국의 최고지도자 鄧小平의 사망 이후시대 중국 국내정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요인, 연안지역과 내지간 소득 격차

및 치안문제의 심화 등 제반 문제점

- 1993년 7월 이후 일본의 자민당 정권 붕괴 이후 호소카와 내각 → 하타 내각 → 무라야마 내각의 등장 등 정당간 이합집산에 의한 단기 내각의 출현은 일본 국내정치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함.
- 1995년초 체첸사태에 대한 무력개입으로 인한 열친정부의 위신 실추, 열친 대통령의 건강문제, 총선(1995. 12) 및 대통령 선거(1996. 6)를 앞두고 러시아 국내정치의 不確實성과 不安定 要因이 증대함.
- 金日成 사망(1994. 7. 8)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金正日체제의 공식 출범을 지연시키는 등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노정함.

(3) 韓半島 상황의 이중성 지속과 北韓體制의 불확실성

- 金日成의 사망으로 6.25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로 美, 日 등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도 체제적 위기 타개를 겨냥한 '對內團結'을 위하여 종래 미국에 대한 적대적 비난을 남한으로 집중시키는 등 남북한 관계개선을 미루고 있음은 물론 악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美·日 등 對北韓 관계개선 가시화와 대조적으로 남북한간 냉전 상황의 지속이라는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飢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구조적 식량난이 급년도 홍수피해로 더욱 악화됨. 이와 같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金日成의 사망이후 1년 5개월이 넘었는데도 金正日의 주석 및 당총서기직 공식 취임을 연기하고 있어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을 드러냄.

- 한편으로는 군사력 강화에 전력 투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200백만 미만의 북한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failed state”라는 북한체제의 극단적인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안정 및 불확실성 증대
- 김일성의 사망이후 이러한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군사적 모험주의 기도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북한내부의 기능가동 여부에 대한 불가예측성 증대

(4) 中·러간 軍事協力 관계의 긴밀화

- 동아시아 안보관련, 미국의 「新亞·太戰略」(EASR) 표명 및 이를 바탕으로 한 美·日안보동맹의 지속 등 美·日 안보관계의 강화 추세에 대한 중국의 견제 및 이와 관련, 최근 中·러간 군사협력 강화 등 양국관계가 긴밀화
- 냉전종식후 미국의 단일패권을 반대해 온 중국은 이와 관련,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러시아도 對中國 군사무기 판매정책은 물론 국내 민족주의세력 등장 등과 관련, 초기 미국을 위시한 親西方 외교정책을 수정·조정하고 있는 바, 어느 정도 中·러 양국간 이해관계가 수렴되고 있음.

(5) 貿易 불균형과 經濟摩擦의 심화

- 동북아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 경제발전이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무역 불균형, 비관세 장벽, 재산권 침해 및 반덤핑 등을 둘러싼 경제마찰로 인한 경제갈등의 심화는 지역 불안정을 야기함.
 -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美·中 간 무역 분규(1995. 2)
 - 무역전쟁 일보직전에 타결된 美·日 간 자동차 협상(1995. 6)

- 경제의 「世界化」(globalization)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韓·美·日 등 주요 경제세력간 資本 및 技術集約産業 등 유사한 산업부문에 집중투자하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마찰 가능성이 상존함.

2. 肯定的 측면

(1) 미국의 적극적 對東아시아 참여정책 표명

- 미 클린턴 행정부는 1995. 2. 「東아시아 戰略報告書」(EASR)를 통하여 현재 東아시아 주둔미군 병력 10만명 수준을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 지속적인 對東아시아 안보 공약 준수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 對東아시아 참여정책을 표명함.
- 美國防部 나이(Joseph Nye) 국제담당차관보에 의한 이른바

「나이 이니셔티브」(the Nye Initiative)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미국의 對東아시아 참여정책은 美·日 안보동맹의 지속 및 중국과의 적극적인 군인사 교류 등을 추진, 미국의 경제 이익이라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동아시아에 대하여 미국이 軍事, 政治, 外交, 經濟 등 제부문에서 전면적인 참여정책을 펴 간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며 東北亞 安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2) 역동적 經濟成長과 상호의존 증대

○ 경제초강대국 일본은 최근 수년간 경제침체에서 1995년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 수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 선진국 진입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 등 동북아는 역내국가들의 경제 최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

- 1993년 韓·中·日 3국간 총무역량은 800억불로 1990년에 비하여 28% 증대

- 같은 기간중 홍콩과 대만을 추가할 경우 東北亞 국가간 총무역량은 2,000억불, 55% 증대

(3) KEDO 가동의 가시화

○ 美·北韓間 제네바 핵합의(1994. 10) 및 쿠알라 룸프르(1995.

6)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형 경수로 및

그 건설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하는 바탕위에서 韓·美·日이 주축이 되는 「韓半島에너지開發機構」(KEDO)와 뉴욕에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고 있음.

- 북한이 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할 경우 美·北韓 제네바 핵합의 이행의 중요한 1단계 고비를 넘기는 것임.
 -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및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지연시키는 물론 실제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음.

(4) 東北亞 安保對話의 가시화

- 東北亞 다자간 안보대화는 東北亞 국가간 상호이해, 투명성 제고 및 협력증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 새 지역질서를 겨냥하고 있는 바, 한편으로는 韓國政府가 1994. 5 「아세안지역포럼 고위간부회의」(ARF-SOM)에서 「東北亞 安保對話」(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에 관한 구상을 제의한 이후 東北亞 국가간 정부간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음. 다른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고) 부설 「國際紛爭協力研究所」(IGCC)를 중심으로 美, 러시아, 中國 및 韓國의 관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부 채널 (Track-II)에 의한 접근이 진행되고 있음.
- 美 클린턴 행정부는 EASR에서 新亞·太戰略의 일환으로 亞·太地域 광역차원의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간 ARF는 물론 동북아 소지역 차원에서의 안보협력 추진을 위한 상기

IGCC를 중심으로 비정부 채널의 「東北亞 協力對話」(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1993. 10. NEACD의 출범이후 현재까지 미·일·러 등 3국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6. 1. 8~10중에 북경에서 제4차 NEACD가 개최될 예정임.
- IGCC측에 의하면 북한이 NEACD 초창기 준비회의(1993. 7)에 참여했다가 3차에 걸친 NEACD 본 회의에 참여를 기피해 왔음. 북한은 내년도 北京 개최 제4차 NEACD 회의 참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나 결국은 불참을 통보해 왔다고 함.

(5) 두만강 개발협정의 공식화

- 1995. 12. 6 韓國, 北韓, 中國,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대표들이 뉴욕의 UNDP 본부에서 두만강지역 공동개발을 위해 이들 5개국이 참여하는 사업협의위원회 설립에 공식 서명함.
- 이로써 두만강 지역개발 사업은 지난 1991년 UNDP가 제안한 이후 4년만에 본격적인 투자이행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3. 1995년도 東北亞 情勢 평가

- 상기 분석과 같이 1995년도 東北亞 情勢는 冷戰以後時代 동북아 지역의 주 특징을 이루고 있는 지역 불확실성 및

불안정에 기여하는 부정적 측면과 어느 정도 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공히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 차원에서 1994년도 東北亞 情勢에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나타났던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위협은 1995년도에 분산(diffuse)된 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東北亞 地域의 주요 지역갈등으로 존속해 온 대만문제 및 남북한 관계의 경색 등 한반도 문제가 지역 不確實性和 不安定 要因으로 가시화 됨.
- 더욱이 냉전이후시대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美·中·日간 이른바 「新3角關係」의 상호 갈등·마찰 및 이에 따른 재조정이 지역정세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등후 대만총통의 미국방문 허용(1995. 6)으로 빚어진 美·中國 갈등
 - 수량적 목표를 내세운 管理貿易接近에 의한 미국의 對日 市場 개방 압력에 따른 美·日간 무역 마찰
 - 美·日 안보동맹의 지속과 이의 견제를 겨냥한 중·러 관계 긴밀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地經學 時代」(the era of Geo-economics)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 그리고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EASR을 통한 적극적인 對동아시아 참여정책 표명과 이의 이행 및 북한의 핵문제를 겨냥한 KEDO 가동의

- 가시화 등이 1995년 東北亞 情勢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요컨대, 1995년도는 냉전이후시대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 국가간 다자간 협력 메카니즘이 결여된 상황에서 지역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한편, 역동적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의 기축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東北亞 地域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동북아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를 심화시키는 한 해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Ⅲ. 東北亞 4強關係

1. 4強의 東北亞 政策基調

(1) 美國

(가) 新亞·太 戰略(EASR)

- 미 클린턴 행정부는 1995. 2. 일명 「東아시아 戰略報告」(EASR)로 알려진 「美國의 對東아시아·太平洋 戰略」을 발표, 과거 부시 행정부가 2,000년까지 동아시아 주둔미군 병력의 3단계 감축을 확정된 EASI(I, II)를 폐기시키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약 100,000명의 동아시아 주둔 병력을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시킬 것이라는 新亞·太戰略을 표명함.

- 미국이 이러한 新亞·太戰略을 표명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는 물론 가공할만한 재래식 병력의 보유 및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서 연유되는 한반도 전쟁 재발 가능성, 21세기 경제·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장래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 불확실성 및 불안정에 대한 인식·평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나) 東北亞地域 안정 역할 지속

- 이러한 新亞·太戰略의 표명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력 회복에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경제의 기축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 이 지역에서 안정자 역할을 지속할 것임.
- 이와 관련, 미국은 동 지역에서 세력균형자로서 지속적인 지역 안보 역할을 수행
 - 경제초강대국 일본과의 양자간 안보관계 계속 유지 및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강대세력 및 경제세력인 중국의 순기능적 지역안정 기여 유도 노력
 - 러시아의 체제전환(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노력 계속 지원

(다) 美·日관계

-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최우선정책 추구하고 관련, 對日 무역마찰 해소를 겨냥하여 「數量的 目標」를 설정하는 등 이른바 管理貿易 接近으로 일본의 강한 반발을 유발하는 등 美·日 무역마찰이 심화됨.

- 이러한 美·日 간 무역마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美·日 양국은 무역이외에도 科學, 技術, 金融 등 제반 분야에서 범세계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는 양국관계의 중요성 유지를 겨냥, 냉전이후시대 동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美·日 안보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합의함.
 - 오사카 APEC 頂上會談(1995. 11)기간중 예정되었던 클린턴-무라야마 美·日 頂上會談에서 양국 정상은 美·日 安保同盟關係의 지속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음. 클린턴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을 둘러싼 의회와의 대립문제로 오사카 APEC 총회에 불참함에 따라 美·日은 1996년 초 東京에서 개최 예정인 美·日 頂上會談에서 새 안보협정에 서명할 것임.

(㉔) 美·中관계

- 1995. 6. 미국 행정부에 의한 대만 이등회 총통에 대한 개인자격의 미국방문 비자발급을 계기로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美·中關係는 유엔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참여차 뉴욕을 방문한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강택민 주석간 정상회담(1995. 10)을 통하여 회복됨.
- 그러나 향후 美·中關係는 다음과 같이 심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교현안, 상호 부정적 인식의 상존 및 양국 지도체제의 약화 등에 비추어 원만한 관계로 발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美·中간에 내년도 CTBT 체결을 앞두고 중국의 핵실험

- 계속 기도, 아직도 조사중에 있는 중국의 파키스탄 및 이란에 대한 미사일 부품판매문제, 티베트 등 인권문제 및 무역마찰 등 외교현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이로 인한 양국간 갈등의 지속
- 더욱이 舊소련에 대한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가 상실된 냉전이후시대에 있어서 미·중 양국은 새로운 공존양식을 구축하기에 앞서 상호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 양국관계에 손상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비교적 反중국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미의회 장악 및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외교부문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클린턴 대통령의 對중국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외교활동의 제약이 예상되고, 다른 한편 중국도 鄧小平 이후시대 리더쉽이 확정되기까지 지도체제 전환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美·中 양국간 놓여 있는 다수의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세계 최대의 인구보유국이면서 세계적인 경제·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양국간 기본적인 국가이익을 겨냥한 상호 협력을 배제할 경우 상호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美·中 양국정부는 「戰略目標」의 공유가 아닌 「利害關係」의 공유라는 새로운 역학관계의 등식을 바탕으로 「競爭·葛藤·協力」의 과정을 통하여 양국간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이나, 양국간에 놓여 있는 제

반 복잡한 이슈에 비추어 볼 때 협력보다는 경쟁·갈등에 치우쳐질 것으로 전망됨.

(2) 日本

(가) 地域强大勢力으로서의 國際 및 地域 役割 증대

- ‘經濟超强大國’인 일본은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와 東北亞 및 亞·太地域 차원에서는 물론 범세계적 차원에서 지역 및 국제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지역 및 국제적 역할은 국내적 제약(평화헌법 등)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에 대한 제반 국제적 제약(아시아 인접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의구심 상존 및 유엔헌장상의 구적대조항 등의 제약)으로 경제원조 및 유엔 PKO에의 기여 등 비군사적 안보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음. 1996년도에도 일본의 이러한 지역·국제차원에서의 비군사적 안보 역할은 지속될 것임.

(나) 美·日 安保體制 지속

- 일본은 冷戰以後時代 美·日 안보체제를 지속하는 신방위정책의 大剛을 확정(1995. 11)함. 일본은 美·日 안보체제의 지속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범세계적 파트너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 함.
 - 그러나 對美貿易 흑자문제로 인한 美·일간 무역마찰은 양국간 최대의 외교현안으로 지속되고 있음.

(다) 對中國 지원과 견제

- 일본은 중국의 현대화 등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자국

의 경제이익을 겨냥함은 물론 중국의 국내정치 안정을 통하여 중국을 東北亞 및 亞·太地域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다른 한편 일본은 對中國 엔(円)차관 공여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중국의 海·空軍力 강화 등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 있음.
 - 1995. 5.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 실시 및 신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항의, 중국에 대한 9,000만불의 무상원조 지급을 중단,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

(라) 對러 政經一致政策 지속

- 1995년도중 日·러간 북방영토 문제에 관한 진전이 없었음.
- 일본은 러시아의 국내정치가 안정되어 일본과의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종래의 政經一致政策을 지속할 것임.
- 그러나 러시아의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바탕으로 한 국내 정치의 안정이 국제정세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국제적 여론에 비추어 일본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對러시아 經協을 가시화시킬 것임.

(3) 中國

(가) 對美牽制 기조 유지

- 중국은 冷戰以後時代 美·蘇(러) 경쟁요인이 소멸되고,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一國霸權主義’라는 시각에서 부정적 견해를 갖

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美·中 갈등이후 중국은 미국의 협력을 받아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강택민 주석이 오사카 APEC 頂上會談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발표하는 등 중국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무역확대 등 실질관계를 확대해 가려고 함.

(나) 勢力均衡政策의 전개

- 중국은 對日關係 강화를 對美關係 개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등 기본적으로 세력균형정책을 펴고 있음.
 - 중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미국의 패권 추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전향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對日關係를 강화하고자 함.
 -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독자적 군사전략을 통한 군사대국화에 반대, 美·日간의 기존 안보체제 유지를 인정함.

(다) 對러關係의 긴밀화

- 옐친 대통령의 중국방문 및 강택민 주석의 러시아 방문 등 양국간 최고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中·러 양국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1995. 11중 예정되었던 옐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건강 문제로 연기되었으나 이번 방문이 실현되었을 경우 옐친 대통령은 집권이후 4번째의 북경 방문이 되는 것임.
- 중국의 러시아로부터의 저렴한 가격으로의 첨단무기 구입 필요성과 러시아의 경화 획득을 위한 군사무기 판매정

책이 맞아 떨어져 최근 中·러간 긴밀한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국은 미국의 단일패권주의 및 최근 美·日의 안보동맹체제 지속 등 재조정 움직임에 대한 견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음.

(4) 러시아

(가) 國內問題 優先政策 치중

- 1995년 초 체첸공화국에 대한 무력 개입, 극우파 민족주의 세력 및 구공산주의 세력간 대립 등은 물론 사회, 경제 등 산적한 국내문제로 인한 러시아의 東北亞 情勢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임.
- 옐친 대통령의 건강문제, 1995. 12 총선 및 1996. 6 대통령선거 등 향후 러시아의 국내정치의 향배가 러시아의 동북아 등 對外政策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나) 러·中關係의 긴밀화

- 冷戰以後時代 과거 적대관계이었던 러·中관계가 특히 군사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
- 러시아는 경화획득 및 무기판매를 통한 영향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 군사무기 판매정책을 펴고 있음.
- 다른 한편, 중국은 해·공군력 강화를 위하여 러시아로부터의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있음.
- 러시아는 현단계에서 東北亞보다는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獨立國聯合」(CIS)을 구성하고 있

는 5개의 공화국이 있는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이른바 「近外 外交」(near abroad)에 치중하고 있음. 한편 중국은 이러한 중앙아시아지역의 소수민족이 중국의 위그르 및 신장 등 지역에 혼재해 있어 동지역으로부터의 급격한 정치변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음.

- 요컨대, 러·中관계는 단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국간 이해관계의 상충에 비추어 냉전초기 러·中 동맹관계로 발전될 수는 없을 것임.

2. 東北亞 4強 相互關係 전망

- (1) 1996년도 美·中·日·러 등 東北亞 4強간 양자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葛藤·競爭·協力次元」(contention/competition/cooperation dimension)에서 다소의 기복이 있을 수 있으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4강 공히 해외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복잡한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됨.
- (2)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는 물론 亞·太地域의 안정과 평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美·日, 美·中, 日·中關係는 오늘날과 같은 地經시대에 있어서 점증되고 있는 이들 상호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비추어 1996년도에는 1995년도 미·중 갈등관계와 같은 상호간 관계악화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5. 12. 총선 및 1996. 3.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만을 둘러싸고 中·대만관계의 악화가 美·中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또한 1996년도 「包括的 核實驗 禁止條約」(CTBT)이 체결되고 중국이 이제까지 공언한 대로 핵실험을 중지할 경우 美·中 및 中·日關係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Ⅲ. 綜合評價 및 1996년도 展望

1. 東北亞 地域 不確實性 및 不安定 지속

- 1995년도 동북아 정세 평가에 비추어 1996년도 동북아 지역 정세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葛藤·競爭·協力」 등 세 양상이 노정될 것임에 비추어 「悲觀的 展望」 또는 「樂觀的 展望」과 같은 분명한 지역정세의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는 冷戰以後時代 다극화 추세의 국제체제의 주요 세력중 EU를 제외한 美·中·日·러 등 4개의 세계적 강대세력이 포진해 있는 반면, 유럽과는 달리 多者間 安保協力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동북아 전략환경의 다음과 같은

유동적인 변화에 기인됨.

- 냉전시대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美·蘇의 축이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소멸
- 대외적으로 구소련의 外交·安保政策을 계승한 러시아의 체제전환 등 국내문제 치중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對東北亞 영향력 상실
- 냉전이후시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속하고 있는 미국과 최근 수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국력의 급신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그리고 경제초강대국 일본간 이른바 동북아 「新3角關係」의 갈등과 마찰 노정
- 미국은 일본과의 美·日 안보동맹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 對中國 참여정책을 추구
- 중국은 미국의 단일패권 정책에 대한 견제를 겨냥,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노력
- 이와 같은 東北亞 戰略環境의 外交·安保的 측면에서의 유동적인 변화 요인이 전반적으로 냉전이후시대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배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특히 1995년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및 대만문제 등 전후 동북아 지역의 주요 지역분쟁이 1996년도 東北亞 安保情勢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경우 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에 따른 변화 수용능력의 제약성, 카리스마가 결여된 김정일 지도체제의 한계성 및 북한주민들의 급속한 정치의식화

(politicization) 가능성 등 제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 유리한 대외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모순에 의해 북한체제의 붕괴 등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동북아 안정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임.

- 대만 총선(1995. 12)결과 이등휘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이 과반수 의석에 근소하게 미달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근해에서의 군사훈련 등 위협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1996. 3 예정인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이등휘 총통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中·대만 양측은 새로운 양안 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그러나 중국 군부의 對대만 강경주의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경우 양안간 긴장이 지속될 것임.
- 요컨대, 1996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소평 사망후 중국의 지도체제의 공고화 필요성, 새 선거법에 따른 총선에 의한 일본의 새로운 내각의 등장,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등 동북아 세력의 국내정치 아젠다에 비추어 1996년도 東北亞 情勢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東北亞의 역동적 經濟發展 지속

- 東北亞 地域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안보위협 감소와 동아시아 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지역협력 분위기가

화 등 평화와 번영을 겨냥한 새로운 지역질서 개편을 위한 조건이 완만하지만 성숙되어가는 한편 냉전체제 와해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양상이 혼재되는 과도기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1996년 東北亞情勢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이 지속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질서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불확실성 요인보다 강력한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전망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첫째, 東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계속되어 역내 평화 및 안정에 핵심적인 政治·軍事的 세력균형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임.
 - 둘째, 역내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貿易·投資 등 경제자유화 추세가 계속될 것임. UR 타결에 따른 WTO 체제의 출범, APEC의 강화 등 경제자유화를 뒷받침하고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이 발전되고 있음.
 - 셋째, 역내국가간 상호의존 증대 및 경제최우선주의는 강력한 시대적 추세를 형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동안보 인식이 확산되고 다자간 안보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 넷째, 역내의 고질적인 분쟁요인들은 가능한 局地化될 것이며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임.
- 요컨대, 이러한 제반 요인으로 東北亞는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냉전종식후 지속되는 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고 1996년에도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3. 東北亞 多者協力の 가시화

- 미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고)부설 IGCC 중심으로 한 동북아 협력 대화 추진을 겨냥한 민간채널(Track-II)의 활성화와 함께 한국 정부의 東北亞 安保協力構想 提議(1994.5 방콕 ARF-SOM 회의에서) 및 일본의 동북아 6개국(南·北韓, 美·日·中·러) 안보협의체 구성 검토 등에 비추어 1996년도중 역내국가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 韓美·일간 정예적인 안보관련 정책 협의, 日·中 및 日·러간 정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安保對話, 그리고 중국의 「軍縮 및 軍備統制白書」 발간(1995. 11) 등 각종의 동북아 국가간 대화 및 일방적인 신뢰구축 조치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레짐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아울러 南·北韓·中·러·몽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 등 동북아 지역경제협력도 두만강지역개발사업 협의위원회의 공식 발족(1995. 12)으로 1996년도에는 동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임.
- 요컨대, 장기적 시각에서 東北亞 평화질서 구축의 주요 메카니즘이 될 이러한 東北亞 多者協力の 가시화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임.

빈 면

제1주제 토론: 주변환경의 변화와 남북한관계

사회자: 양성철(경희대 교수)

토론자: 신상진(국제연구실 연구위원)

전동진(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양성철: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민족통일연구원의
신상진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진: 1995년의 동북아 정세가 안정과 불안정의 이중성을 보
여왔다는 김국진 교수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상반된 의
견 보다는 김교수님의 논지를 중심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교수님은 북한정세와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가 동북
아 정세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하셨
는데 저는 이 중에서 중·대만 관계에 대해 몇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대만관계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는 중국의 정치상황 변화가능
성과 내년 3월에 있을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소평 사후 중국은 주권문제와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가진 군부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추세속에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고취로 국민통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이 대만 독립움직임에 강경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의 대만 총통선거의 특징은 기존의 선거가 대륙출신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대만주민의 90%를 차지하는 토착민에 의한 선거라는 것인데, 현재 대만의 여론은 통일 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통선거에서는 대만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후보자가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상유지는 통일 보다는 오히려 독립을 바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무력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내년 F16과 미라주기 대량구입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이 군사능력을 강화하기 이전에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력도발의 경우에 미국 역시 수수방관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여론은 통일이나 독립 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관계문제로 인해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만문제가 동북아정세의 급작스런 변동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국진 교수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중·일정책이 어떠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의 한중 정상회담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협조하여 일본을 견제하는 형국을 보인 바, 과연 이런식의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 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최근 KEDO와 북한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외교 공세를 적극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양성철: 다음은 전동진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동진: 김교수님은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참여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국이 정치일정상 국내정치에 몰두하게 되는 상황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 동시에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증대의 경향으로 인해서 갈등 보다는 협력을 바라고 있다는 점, 또한 미·일 축에 대립하는 전략적 중·러 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 외에는 동북아 정세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국진 교수님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별도의 코멘트 보다는 보완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동북아 참여 정책을 보면 일본을 지역안보의 주요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일본의 역할중대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일본의 역할중대를 어느 선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역할중대에 대한 견제방식이 일본의 역할중대 자체를 반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위상중대나 역할중대를 꺾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인지 김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김교수님의 논문 중에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중대를 용인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 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기대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제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마일 측에 대립하는 중·러 측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철: 그러면 김국진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우선 신상진 박사님의 대만문제에 대한 코멘트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만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제압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군사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초강대국이 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과연 역사 이래 최초의 현대화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

나 혹은 무역갈등으로 치닫는 일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난 강택민 방한이나 이홍구 총리 방중시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스처는 정치적인 의도를 깔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미·일의 협조체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status-quo를 인정하기 싫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일국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가까운 관계를 강조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자신이 4강관계나 국제관계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란 본래 multi-dimensional한 것으로서, 우리는 중국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안보적 차원에서는 미·일과의 협력을 희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민·학 공히 다층화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접근한다고 해서 감지덕지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할 수 없음을 미리 중국에게 양해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박사님이 지적하신 미·일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본의 독자적 군사무장은 인정 못하지만 대국화는 인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미·일 축에 대립한 중·러 축의 형성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상대로 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중국적인 게임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중·일관계를 보

는 criteria는 미·일관계에서의 일본의 독자화 정도와 다자안보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대일정책은 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테크닉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과거사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외교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중관계는 미·일과 비교해서 양국의 체제상의 차이 때문에 근접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나 양국간 실익의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관계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현황과 전망

이 중 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현황과 전망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목 차 >

- I. 북한 현황
- II. 향후 북한전망(1~2년)
- III. 맺음말: 북한정세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는 우리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정상을 넘어서는 관심은 초유의 지도자 사망과 공식권력승계의 지연, 그리고 경제의 위기 심화라는 북한 내부의 정세변동요인들이 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정세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많은 경우 부정확한 정보나 난무하는 첩보들과 구분될만큼의 신뢰성을 쌓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의 분석역시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보다 객관적인 북한분석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북한의 현황

과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 북한 현황

1. 정 치

1) 김정일의 권력장악 상태 개괄

현재로서는 김정일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i) 김일성 생존시 구축해 놓은 김정일의 당·국가·군에 대한 장악체계가 동요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포착되고 있지 않다.¹⁾

ii)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군부대를 방문하고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는등(1995.4.28) 부분적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공개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는 김일성 사후 지금까지 북한사회의 방향을 제시한 3편의 논문²⁾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통수권을 행사해 왔다.

iii) 북한 선전매체들의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 우상화 작업 중 눈에 띄는 것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수령승계를 북한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주도

1) 1995년 내내 각종 행사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권력서열에는 특기할만한 변동이 없었다.

2)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년 10월 2일).

면밀한 선전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서 『로동신문』은 1995년 6월부터 2면에 고정적으로 매일 김일성의 ‘업적’을 회상하는 사진과 어록을 싣다가 김일성=김정일이라는 등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1995년 7월 17일부터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라는 이름아래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행지도 사진을 함께 싣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 5일간은 김정일의 ‘덕목’을 언급한 김일성 어록³⁾을 싣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김일성 김정일의 동행지도는 점차 김정일의 활동이 부각되면서 1995년 10월 5일부터는 김일성 어록대신에 김정일 어록을 싣기 시작하였다.⁴⁾

한편 현재 김정일이 생전에 김일성이 맡고 있던 ‘수령’을 나타내는 최고위 직책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가주석직을 아직 계승하고 있지 않으나 이 승계는 시기만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김정일 권력승계 지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①경제적 난관의 지속과 水災등으로 추대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②권력기반 공고화와 정통성 증대를 위해 김일성 유훈 및 후광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즉 ‘유훈통치’ 때문이다. ③내부적으로 김일성 통치를 결산하고 김정일 자신의 새로운 통치노선을 확정하는 작업이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④김정일의 건강문제 때문이다. 즉, 김정일이 당대회

3) 그 첫번째 김일성 어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김정일 동지가 우리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모든 일이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4) 최초 어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존함과 업적으로 하여 우리당의 50년 력사가 빛나는 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은 우리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 할 것이다”.

가 개최되어 총비서가 될 경우, 통상 수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총화보고를 할 수 있을 만한 건강상태가 아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지연은 위의 요인 중 어느 하나 혹은 몇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어느 요인이 직접요인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유훈 통치’는 어떤 경우에도 지연 사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2) 오늘의 북한을 이끌어 가는 축: 당 비서국과 군사위원회

현재 북한사회를 이끌어 가는 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라고 볼 수있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결원을 채우고 있지 않은 비정상 상태에서 실무 집행 결정기관인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는 결원없이 정상가동되고 있다.

현재 비서국은 당과 국가 전분야를 김정일의 지도아래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당 군사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을 보좌하며 군부를 장악하고 군수산업⁶⁾을 관장하고 있다.

5) 필자는 어떤 경우에도 유훈통치설이 김정일 승계 지연의 중요 사유를 이룬다고 본다. 이는 김일성의 중국인 빨찌산 동료 진뢰와 그의 부인 리민이 쓴 글에 나오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의 로세대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어오도록 추대를 마다하고 계시는 여기에도 오로지 수령과 혁명,인민만을 위하시는 그분의 특유한 충효의 도덕관이 놓여 있다고 본다”는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매한 인품과 덕망을 되새겨보며」 『로동신문』 1995년 7월 5일.

6) 북한의 군수산업은 정무원이 관장하는 부문(제1경제 부문)과는 별개의 부문(제2경제 부문)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이 제2경제 부분의 책임자는 김철만^{으로 알려져 있다.}

3) 김정일과 군관계

현재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군 관련 직책은 헌법상 군사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김정일에게는 김일성과 같은 유격대 경험도 군 복무경험도 없지만 그가 북한군의 최고지도자이며 유일권력자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군부는 어느집단보다도 먼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 왔다. 김일성은 생전에 김정일의 군 장악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그는 1991년 12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리를 김정일에게 넘겨주었으며 1993년 4월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도 넘겨주어 급작스러운 자신의 유고에도 김정일이 군을 장악할 수 있도록 대비해왔다.

현재 김정일체제를 받치고 있는 북한의 군 수뇌부는 ①항일유격대 출신의 혁명1세대 ②만경대학원출신 혁명2세대 ③한국전쟁당시의 유자녀 출신등 세개의 부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대개 자신의 이해관계를 김정일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공식행사가 군부대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도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치뤄진데 대해서 현재 여러가지 논의가 분분하다.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의 몇가지로 보고 있다.

①김정일의 직책중 공식적으로 수령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같은 군사분야이기 때문이다. ②병영사회주의인 북한이 위기에 처하자 전통적인 위기 극복방식으로 '총국방 체제'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이다. ③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군수산업인 제2경제부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선권 인정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제1경제부문과의 분배비율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군부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④개방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남정책과 개방화추진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군을 위무하기 위한 전술이다. ⑤김정일의 확고한 군 장악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현재 북한의 군대는 혁명 원로들이 각 부서의 長을 차지하고 실제 집무는 혁명 2세대들인 副자를 단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副字體制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최광(인민무력부장) 백학림(사회안전부장) 김영춘(인민군 총참모장) 조명록(인민군 총정치국장)등 혁명 원로들은 북한사회와 군의 단합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형식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실무는 부부장(김광진 등), 부총참모장, 부총국장(이봉원, 박재경 등)들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북한 지도부내 정치적 분파의 존재여부

일인절대권력체계에 기초한 유일체제를 구축해온 북한의 정치구조에서 현재 상황에서 분파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자신이 속한 부서 혹은 업무의 성격(군사, 보안, 대남혁명분야 VS 경제, 외교분야)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개방'과 대남문제를 둘러싸고 보수, 개방의 주장이 분분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직화된 세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분파라는 개념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2. 경제 및 사회, 군사

1) 경제

현재 북한은 내부의 자원고갈과 만성적인 에너지·식량부족, 수재 등으로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중유지원 및 남한과 일본의 쌀지원 등이 부분적인 경제호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경제회생을 위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물고을 체제위협요인을 우려해서 매우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개방정책의 표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경제특구) 개발도 이 지역 개발이 대규모 국토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북한자체로는 계획된 투자수요와 인력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자체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에 따른 투자의 감소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진행속도로 보아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향후 2~3년내에 북한경제의 호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독점의 교역체제로 인한 수출 인센티브의 결여와 대외 무역체계의 혼란이 노정되고 있으며 수출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무역증대정책이 한계에 부딪쳐 있다. 북한은 경제난 타개책의 대안으로 일본, 미국 및 동남아, 유럽국가들과의 경제관계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북한경제의 난관은 사회주의 중앙집권경제체제의 문제점과 유일체제의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체제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2) 사회

현재 북한 지도부는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와 유입되는 정보의 여과장치, 감시동원체계 등 제반 사회통제 장치들의 작동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강한 사회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1990년대 들어서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경제의 위기속에서 통제체제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자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조직하여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단속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규모 민중봉기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식량배급 등을 둘러싼 국부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常存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최근들어서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의 이동(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流動性 증가는 곧 사회통제의 점진적 이완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당수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들 대부분이 유학생, 별목공, 외화벌이꾼, 물자조달원등 외부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탈북현상을 아직 사회저변의 동요로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⁷⁾

7) 1990년 이후 탈북 귀순한 200여명중 아직 농민층이 한명도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촌 협동농장에 거주하는 농민의 유동성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이 중요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3) 군사

북한지도부의 국방에 대한 강조와 북한 공업구조의 부문간 불균형(군수분야의 기형적 발달), 군수분야 투자 경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서 군사력 강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3. 대남 및 외교

1) 대남정책

(1)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 대남정책의 딜레마

현재의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당국자부문의 관계 경직화와 비당국자 부문의 제한적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 몰락과 탈냉전,생산력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심화와 북한경제의 위기라는 국내적 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통일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구도는 그들의 대남전략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조건들 사이의 내재적 상충성으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이것이 종종 정책 혼선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이 안고 있는 대남정책을 결정짓는 구조적 조건들 사이의 내재적 상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인식에 내재한 딜레마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인식은 '우월한' 북한의 혁명역량의 지원을

지닌 농민층이 아직 동요되지 않다고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받는 남조선혁명론에 기초한 '혁명대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경제의 침체에 직면하여 그에 대조되는 경제성장을 보인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우려의식이 북한 사회 지도부는 물론 일부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두가지 의식이 인식론적으로 상충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 두 인식이 북한 지도부의 대남인식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는 혁명론적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흡수통일 우려의식이 확산되고 있는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로동당 내에 대남혁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료제 사회의 특징인 각 부서간의 기관본위주의가 북한의 관료제에도 깊게 뿌리박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북한의 대남정책에도 상호 모순적인 이 두인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서 정책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북한의 생존전략과 대남관계의 逆行的 상관관계이다.

북한은 현재 1994년 10월 북미회담 타결이후 미국이 主敵範圍에서 제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와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에서 나오는 위기의식을 체제유지와 내부단결에 활용하는 이른바 '적대적 의존관계'의 대상자로서 남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1995년 내내 격화되었던 북한의 대남비방은 바로 이 맥락위에서 전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한과의 '적대적 의존관계'의 유지 필요성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체제발전 전략상 남한과 무조건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현재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속에

서 체제생존을 위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대외경제관계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전자의 관점을 유지한다면 대남관계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외교무대에서 남한정부를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는 남한정부를 배제하고는 대서방관계를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그 경우 북한은 경제 활성화 노선으로 채택한 대외경제관계의 확장정책이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점차 어쩔수 없이 남한정부와의 대화에 나설수 밖에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북한체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남한과 적당한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생존전략과 관련한 대남정책 역시 상호모순적이다. 현재 북한은 이 상충되는 두 요소를 모두 필요조건으로 안고 있다. 바로 이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 유지와 관계 개선이라는 상충되는 두가지 내재적 요구속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현재 어느 한 요구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더욱 어정쩡함을 보이면서 정책혼선도 종종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대남정책의 구조적 결정 요인들중 과거 김일성시대에 북한에게 영향을 미친 대남전략의 구조적 요인은 주로 전통적인 대남혁명전략과 적대적 의존관계의 유지였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환경의 변화속에서 앞에서 설명한 새로운 요인들이 대남정책 결정의 중요변수로 등장하였다. 바로 여기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들속에서 내재적 상충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상충은 단기적으로는 주로 정책혼선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으나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

화된 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북한의 현단계 대남정책분석

무장간첩 침투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고 북한의 대남정책이 호전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그동안 계속되어온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은 그동안 공개적인 대화와 내면적인 ‘혁명공작’을 병행해 왔다. 다만 ‘혁명공작’의 경우 남한 체제역량의 강화와 북한상황의 악화에 따라 최근 들어 뜸해졌으나 최근 간첩사건은 그 관성이 발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이 사건들을 남북관계를 새삼 경직시킬 중요한 이유로 부각시키는 것은 옳은 상황판단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현단계 북한의 대남정책에는 앞에서 설명한 북한의 정책적 이중성이 빈번히 노정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남군사관계

북한은 현재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을 내세우며 남한을 배제한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전체제의 폐기를 목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의 無用化를 시도하고 있다.

2) 외교정책

(1) 북한의 對周邊國 정책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권 몰락과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에 직면하여 기존의 동맹국이었던 중소와의 관계 조정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서 대외생존의 틀을 짜기 위한 '새로운 판짜기'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판짜기'의 핵심은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이며 그 구도는 남한배제의 기초위에 중국과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와 친선을 유지하며 미국과의 친선을 도모하며 일본과 경제적 유대를 증진하는 방향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은 특히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방 자본의 유입을 위해서 미,일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에서 바라는 것은 북한의 안전보장 및 체제보장이며 북일관계 개선에서 바라는 것은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자본 유입일 것이다.

(2) 최근 주변국들의 대북한 동향

북한의 적극적인 대미,대일의교와 맞물려 최근 미,일 역시 대북 수교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① 북한 핵문제의 안정적 관리 ②동북아에서 기존 질서 주요 요소였던 냉전을 대체할 새로운 지렛대 모색 ③ 중국 견제 등이다.

일본의 경우:①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신질서형성의 유리한 지점 차지 ②한반도에서 분단의 안정적 관리 희망 ③군사상 북한의 대일공격 구도(미사일) 포기 ④중국전제 등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북한과 기존의 맹방적 경제관계(지원)를 축소하고 정상적 경제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의 지원이 어려운 경제에 큰 힘이 되었던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북한과 전통적인 맹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한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균형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조소 상호원조조약의 폐기 및 신조약의 체결천명이 보여주듯이 현재 약간 남한에 기울어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II. 향후 북한전망(1~2년)

1. 정 치

1) 권력승계 시기 전망

권력승계는 앞에서 설명한 지연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연 사유별 예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경제난: 3차7개년계획의 조정기간(1994~1996년)이 끝나는 1996년말이나 1997년초. ②'유훈통치': 3년상이 끝나는 1996년 7월 부터 10월 사이. ③김일성시대의 결산과 김정일 통치노선의 미확정: 제네바 북

미합의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시기. 대체로 199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됨. ④ 건강문제: 시기 불투명

이상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건강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김정일은 대체로 1996년 7월 이후 1997년초 사이에 승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정일의 권력승계방식은 다음의 3가지 방식중의 하나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①당 총비서,국가주석 겸직 승계. ②당 총비서 승계, 국가주석은 다른 지도자가 승계. ③당 총비서직만 승계, 국가주석직 폐지.⁸⁾

이 세가지 방식중 전망확률은 ①, ③의 순서이다. 유일지도체계에 대한 '형식적인' 이완의 필요성과 김정일의 '대중기피적 성격', 그리고 북한이 김일성 시신을 그가 생전에 집무하던 주석궁의 집무실(3층)에 안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③의 가능성도 높다. 반면에 국가주석의 對住民 이미지(김일성=주석)와 실제위상을 감안할 때, ②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권력구조 재편방향

老·壯·靑이 조화를 이루되 혁명2세대가 국정을 책임져 나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광, 박성철 등 혁명1세대가 형식상 예우되면서 혁명2세대가 사실상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한편

8) 이는 형식적으로 유일지도체계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것으로서 실현될 경우, 정무원의 격상[국무원 식으로]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위상강화[상임위원회 식으로]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 생존시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 역할을 해왔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현재 기존 멤버였던 김일성, 오진우의 사망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상무위원회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폐지되거나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구는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고 대신 정치국의 실질적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에서 향후 단기적으로 김정일 권력체계를 위협할만한 동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의 경제난관 타개책과 그로인한 부문간 예산배정문제, 대남문제, 대서방관계 개선 등을 둘러싸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한 지도부내의 노선·정책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은 높다.

2. 경제 및 사회분야

1) 경제

북한경제는 수재로 인해서 96년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7년부터는 수재피해가 어느정도 복구되어 예년수준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문제⁹⁾는 외부지원으로 최악

9) 북한의 정확한 식량수요 예측은 북한의 식량난의 정도를 파악해 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부는 1995년 북한의 식량 수요를 672만톤 정도로 예측한 바 있다. (『월간 북한동향』1995.1, 28쪽) 그러나 필자는 북한의 식량수요가 500만톤 남짓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 이 계산은 북한주민 1인당 하루평균 수요량을 500그램으로 보면(강계시 양정과에 근무한 바 있는한 귀순자에 따르면 인구 30만명의 강계시의 1일 식량소비량이 117톤이었다고 한다) 연간 약 400만톤이 수요되며(군대 포함) 공업용등 기타 수요량을

의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내핍 생활로 인한 체제붕괴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⁰⁾ 그러나 수재의 영향으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개방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생활필수품과 경공업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수년 내 농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상설시장화 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평양 이외의 대도시에 수십개의 매대군락을 이루는 초보적 수준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북일수교의 지연으로 2~3년내에 대일청구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적으나, 만약 대일청구권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외부기업의 투자유인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호전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 북한경제에서 노정될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앞에서 이미 시사한 정무원이 관장하는 민수부문의 제1경제 부문과 군수부문인 제2경제 부문간의 자원배분의 조정과 제2경제부문의 민수부문으로의 전환문제이다. 후자 문제의 경우 국제적인 탈냉전과 북미관계의 개선등으로 무기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북한이 기존의 유일체제를 고수하는 한 유일체제의 극단적인 일원성이 개방이

100만톤 남짓으로 본 데 근거한다.

10) 역사적으로 북한체제가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내핍생활을 요구해오면서 위기대응체제의 성격을 띠며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연적으로 유입시킬 다원적성과 마찰을 빚으면서 체제동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¹¹⁾ 즉, 시장경제와 함께 유입되어 들어오는 다원적요소의 사회내 침투는 강력한 일원적 성격을 지닌 사회체제와 긴장상태를 유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긴장상태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개혁개방이 체제동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결국 유일체제는 그 일원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개방이 몰고올 전체사회에서의 다원성의 발양을 탄력적으로 감당해내기 어렵다.

2) 사회분야

경제난관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증가는 곧 사회통제의 점진적 이완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관계를 통해서 자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관계 종사자들과 화교, 일본에 연고가 있는 북송자들이 새로운 부유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식량부족으로 배급체제가 이완되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이는 병영사회주의체제의 기초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군사분야

지속적인 경제적 난관이 2~3년내에 군비팽창 추세에 제동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11)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역사비평사, 1995, 147~159쪽 참조.

3. 대남 및 외교분야

1) 대남정책 전망

(1) 개괄

북한은 대남정책 속에 내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당국자간 관계의 냉각화와 비당국자간 관계의 제한적(주로 경제분야에 제한)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¹²⁾ 그리고 이 대남정책 수행과정에서 기존의 혁명노선의 관성과 기관본위주의가 새로운 구조적 조건들과 상충하면서 정책혼선이 빈번히 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관계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

(2) 부문별 대남정책전망

a. 교류정책

i)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속에서 정부수준에서의 교류는 최대한 피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의 교류도 인적교류를 통제할 채 물적 교류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ii) 정상회담문제에 대해서는 94년 7월 조문파동이나 체제유지를 위한 남한과의 '적대적 의존관계'의 필요성을 고려해볼 때 북한이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김정일 공식권력 승계후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서 역으로 정상회담에 적극 호응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 지난 1~2년간의 대남정책 역시 당국자부문의 악화와 비당국자 부문의 제한적 활성화로 특징지워진다.

김정일이 정상회담 개최를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북한 권력구조의 특수성

1인 절대권력자의 결단이 가능한 구조. 북한에는 이 결단을 주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학습체계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

② 김정일의 지도력

김정일이 현재 북한의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지도부는 ‘광폭정치’, ‘통 큰 정치’를 강조하며 김정일의 조치를 합리화할 수도 있다.

③ 김일성 유훈으로서의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은 김일성의 유훈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에도 응할 수 있다.

b. 통일방안

북한은 현재 연방제를 高唱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연방제에 국가연합적 성격을 상당 부분 가미시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연방제는 사실상 남북한간의 무제한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론적으로 볼 때 국가연합에 비해서 오히려 북한의 남한에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방안은 이 시기에 점차 형식적으로는 연방제(‘고려민주연방제’)를 주장하되 내용은 국가연합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c. 군사정책

i)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북미간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기존의 정전상태를 해소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강도높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 일환으로 미국과 남한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 無用化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중간단계로 북-미간의 직접 군사접촉 창구 개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의 직접 군사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정전위가 無用化되면서 휴전선일대의 분단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소규모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남한이 반대하는 한 북미평화협정체결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미 평화협정 공세는 북한이 이 협정의 실제적인 실현보다는 남한의 약점을 파고들으로써 대남및 대서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술적 공세의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1980년대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평화협정공세의 최종목표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달성을 위한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와 사회주의권의 몰락, 북한경제의 장기적 침체 등에 직면하여 북한의 평화협정공세의 목적이 변화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의 대미평화협정공세의 기본목표는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평화협정공세는 협정체결 자체에 비중이 두어져 있다기 보다는 이 공세 과정에서 남한 배제외교를 실현하고 한미관계의 유대 약화를 시도하는 등 남한과의 경쟁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또한 이 공세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대미 의존성'을 부각시켜서 전반적인 남북대화, 대서방관계에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도 아울러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는 경수로문제를 포함한 현안의 대남, 대서방관계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철폐 주장을 약화시켜 오고 있으며 1994년 10월 21일의 북미회담 타결이후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기존의 인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과거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력의 차원에서 보았으나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점차 장기적으로 남한의 북한 공격 억지력의 역할도 수행하는 安定者(stabilizer)로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심화로 인해서 남북한군사력이 역전될 수 밖에 없음을 예상한다면 이는 충분히 상정할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도 점차 한반도에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미군병력의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i)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관계의 청산을 계기로 중국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iii)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미국의 위협인식이 감소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미협상에서 군축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2) 외교정책 전망

i) 북한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당분간 대외생존의 틀을 확고히 짜기 위한 '새로운 판짜기' 성격의 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ii) 북한은 외교적 고립의 탈피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방 자본의 유입을 위해서 북미, 북일수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대일청구권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미일과의 수교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iii) 경수로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난항에 빠지게 되면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협조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소한 부분에서 북한 특유의 '트집잡기' 행태를 빈번히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3) 96~97년 남한의 선거 및 미국의 대선과 북한

(1) 1996년 4월, 1997년 12월에 치뤄질 남한의 총선 및 대선과 북한의 이해

북한은 대외적 명분으로 남한에 보다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정부의 출현을 희망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남한과 적대적의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주장이 그들의 진심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남한의 상황은 ①흡수통일 우려를 불식하고 체제경쟁에 유리하도록 총체적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며 ②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좋은 상황 즉, 독재체제의 등장, 경제침체, 사회혼란 등일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정권의 성격은 체제비교에서 현격한 우월성을 보이지 않을 독재정권이나 무능정권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정권이 취약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해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96년 4월에 있을 남한의 총선에서 북한이 어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전략보다는 사회혼란을 증폭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남한의 선거에서 북한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이 逆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문제 분석은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북한지도부내에는 현재 전통적인 통일전선전술을 믿으며 북한이 남한의 대중에게 상당한 '正'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태도표명이 오히려 역작용을 나타낸다고 보는 현실론자들이 혼재해 있어 어느 쪽이 대남전략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북한 주장의 내면에 깔린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북한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천명했을 때 그것이 그 대상을 당선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낙선이 목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민주정부에 대해서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가장 부담스러워 할 것이며, 쿠데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상대적 경직성을 위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1997년 12월의 대선에서는 북한의 그때의 노선에 따라서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의 노선이 개방개혁을 명확히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노선을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 희망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노선을 유지할 경우 적대적 의존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권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흡수통일 우려의 콤플렉스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 개혁개방의 본격화를 시도할 경우 남북 경협이나 대북관계에서 유화적 사고를 지닌 정치세력을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2) 1996년 미국 대선과 북한의 이해

대미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희망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외교가 집권당의 변화와 크게 상관없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공화당정권의 탄생이 기존의 북-미관계의 전개방향을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화상대자가 교체될 경우 관계 조율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클린턴의 당선을 위해서 적어도 클린턴의 외교적 업적에 속하는 경수로 문

제등에서 선거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진전을 보여주거나 적어도 상황악화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4. 정세전망과 북한의 대응 종합

앞의 서술을 종합해서 향후 1~2년간의 북한 정세를 전망해보자.

먼저 정치적으로 북한은 비교적 안정구조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도 변화요인들이 점증할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근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발생할만한 요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으로도 상대적 안정성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기조가 북한의 조기붕괴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안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현단계에서 북한정세 변화의 중요변수로 등장한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위기의 지속 혹은 상대적 악화를 넘어서 체제의 심각한 동요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 향후 1~2년간 북한체제는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경제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를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북한지도부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인 지도부의 균열은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ii) 북한에는 폭력적 억압기구가 건재하고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해낼 만한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다.

iii) 체제변화의 중요 요인은 사회구성원들이 외부세계와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 박탈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주민들의 외부와의 정상적인 정보유통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 점차 외부정보의 유입통로가 넓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의식을 발생, 증대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iv) 북한지도부는 현재의 북한 상태를 최악의 상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현재의 상태를 최악으로 판단한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오히려 적극 나설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단행할 경우 남북경협, 미일과의 수교, 대일청구권 문제등에서 남한이 협조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적대적 의존관계 유지의 필요성과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속에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러한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아직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카드를 쓰고 있지 않은 까닭은 북한의 오판이 아닌한 그들의 체제관리능력이 아직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동북아 주변국가들이 북한붕괴와 같은 안정을 깨뜨리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미, 일조차도 그들의 국가 이익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상의 북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지도부는 **기본적**

으로 경제개방과 사상통제라는 이중적 정책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자신의 문제점을 단순한 경제문제로 돌려 체제개혁을 하지 않은 채 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가려 할 것이다. 이 개방정책도 개방의 불가피성과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적 확산 방지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적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방충망식’ 개방정책). 물론 이 경우 체제개혁의 거부로 개방의 효과가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현재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내부자원의 고갈과 산업부문간 불균형,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3대 제일주의’(무역·경공업·농업제일주의)를 기본 경제노선으로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농업개혁방식으로 리단위의 협동농장을 군단위 농업연합기업소로의 전환을 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¹³⁾

한편 북한은 경제에서의 개방정책에 대응해서 간부와 대중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이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적 통제력과 폭력기구의 건재를 과시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그러나 이러한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영화 발상으로 일반적으로 농업생산력 발전을 더욱 지체시켜 식량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Ⅲ. 맺음말: 북한정세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나 향후 1~2년간의 북한정세는 비록 북한이 체제는 유지해 나가겠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으로서는 그 성공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사실상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1996년 4월 총선 이후 1997년 상반기 사이에 북한이 먼저 현재의 냉각된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¹⁴⁾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담당자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구조상 우리가 조급하게 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의연하게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행해나가면 북한이 먼저 대남 접촉을 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이며 북한변화론적 안목이 필요하다. 장기적 유화론적 대북정책은 i)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정권에게 너무 긴 인내를 요구하며 ii)북한이 항상 이 노선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¹⁵⁾ 정책 주창자들의 입지를 항상 좁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정

14) 필자의 이러한 시기 전망은 1994년 7월 이후 지속되어온 북한의 대남적대관계가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1997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발전계획의 자원조달문제 등에 부딪쳐 내년 총선 이후에는 부분적이라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15) 환관상 장관시절 이인모 노인 송환 발표 직후 행해진 북한의 NPT 탈퇴선언을 상기해 보라.

책이 궁극적으로 실효성을 얻으려면 대북정책방향을 보다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한 북한정세변화 전망과 관련해서 향후 1~2년간 우리가 주력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i)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다원화와 상대적 박탈의식의 증가를 추동하는 북한사회의 저변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대북정책의 수립, 수행이 필요하다.

ii) 북한 내의 개방, 남북관계 개선 관련부서나 이를 주장하는 인사들의 입지와 선택 폭을 넓혀주는 정책의 구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남관계 개선을 통해서 명백히 얻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케 하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의 제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iii)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의식을 불식시킬 수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북일 수교협상에 우리가 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다.

iv)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장기수 송환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⁶⁾

16) 북한은 대남관계 개선의 3개조건(조문파동 사과, 국보법 철폐, 장기수 송환)중 사실상 두가지 문제는 스스로 회석화 시키면서 장기수 송환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 김정일 치적 선전, 남한이 상대적으로 수용 쉬운 카드)

제2주제 토론: 북한 현황 및 전망

토론자: 최수영(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교덕(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양성철: 고맙습니다. 토론은 민족통일연구원의 두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북한경제 전문가이신 최수영 박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최수영: 이종석 박사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답게 북한의 현황과 전망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발표내용이 대부분 학자 및 연구자들과 일치하는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망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기 보다는 결론 부분의 제언과 본문에서 저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이종석 박사께서 몇 가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필요성, 둘째는 인권문제 제기의 신중성, 셋째, 북·미, 북·일 관계개선에의 협조, 넷째, 장기수 송환 고려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제언 중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째부터 네번째까지의 제언은 유화적인 정책인데 비하여, 첫번째 제언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의 적대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 첫번째 제언과 나머지 두번째부터 네번째까지의 제언은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강경입장을 취하든가 하는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북정책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을 반드시 세워놓고 사안별로 변화를 주거나 융통성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군수분야의 투자경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군사력 강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경제력은 80년대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력 강화추세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군사력의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강화추세는 실제로 무리라고 봅니다. 사상에서의 강화추세는 있을 수 있지만, 현단계 북한에서 경제와 연관된 어떤 분야의 강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권력승계시기에 있어서 몇 가지 예상시기를 가늠하면서, 완충기가 끝나는 시점, 유훈통치, 나진-선봉특구가 활성화되는 시점, 건강문제 등의 요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승계의 시기를 96년도 하반기나 97년도 초로 예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첫번째와 세번째 요인은 북한 권력승계시기 전망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충기 기간에 북한의 경제난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완충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 시기 동안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고 볼 때, 이것은 단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무마용일 지언정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진-선봉특구 개발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시기가 96년도 하반기라면 저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진-선봉특구 개발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남북관계 및 대미·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보아서도 이것은 결코 97년에 이르러서도 진척이 없을 것이고, 사실상의 기대가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권력승계시기 전망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정책을 무용화시키기 위하여 휴전선 일대나 비무장지대에서 소규모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를 차치한 상태에서의 대미관계 개선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군사정책을 무용화 시키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규모 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형태에서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꼬투리를 잡는 자세를 취하는 정도일 것이고, 더 큰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재 새로운 농업개혁방식으로서 군단위 농업연합기업소로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농업생산력 발전을 더욱 지체시켜 식량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아야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협동농장에서 국영농장으로 가는 것이라도 북한이 국영농장의 장점만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농업생산력 향상에 일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성철: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교덕 박사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이교덕: 오늘 제가 토론을 해야 할 주제는 북한현황과 전망입니다.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현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예측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처방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박사께서는 북한에 대해 여섯 가지 분야-정치·경제·사회·군사·대남관계·외교-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을 하셔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여섯 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을 시도한 관계로 큰 줄거리의 논지가 흐려지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박사께서 주장하신 여섯 분야에서의 진단과 예측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북한전문가 대부분이 이 박사께서 주장하신 내용에 거의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

하고라도,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대남정책에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의 내재적인 상충성입니다. 첫번째 상충성은 북한이 남한을 혁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체제경쟁에서 수세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적대적 의존관계의 파트너로서 남한이 존재해야 하는 한편 생존전략에 입각해서는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재적인 상충성으로 인하여 정책적인 이중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습니다. 그런 분석에 공감을 하면서도 최근에 나타난 두 가지의 상충성 해결 방식이 당국자간 관계의 냉각화와 비당국자간 관계의 제한적 활성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셨는데, 저는 당국자간 관계의 냉각화와 비당국자간 관계의 제한적 활성화가 내재적인 상충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의 대남정책의 기본노선이었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현 상황과 남북관계개선의 연계성에 대하여 북한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아니며, 만약 북한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쓰고 있지 않은 까닭은 북한이 체제관리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의 逆논리도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북한이 체제관리능력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오히려 북한은 옳하고 북한은 남한의 선한 의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면, 북한

의 위정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고를 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쪽에서 자기들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들의 약점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남북관계 개선을 회피하는 경향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적대적 의존관계의 유지 필요성과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논리에 따르면 정확한 기술이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이 네 가지 제시되어 있지만 세번째, 네번째는 두번째로 통합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북한 체제의 동요를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이 박사께서는 북한이 체제의 안정을 잃고 동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 다원화, 즉 경제개방을 하게되면 경제개방과 더불어 유입될 다원성과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을 때 체제가 가장 크게 동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사회적 다원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추동하는 정책이라면 이것은 북한을 심하게 혼드는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책과 유화정책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정책이 좋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존재가능성 여부 즉, 정책의 구체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다원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북한의 대남유화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 상태에서 보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계사적으로 유화정책의 실패

사례인 나찌에 대한 영국의 유화정책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일 한·일관계에서 일본에게서 유리한 대한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친한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그 친한세력과 반한세력이 대등할 때는 친한세력을 복돋아 주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대남 유화세력이 대남 강경세력보다 약할 경우에 유화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정책의 구사가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능성과 입지를 좁혀버리는 역효과의 발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런 정책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양성철: 고맙습니다. 이종석 박사께서 토론자의 언급에 대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석: 좋은 코멘트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최수영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동의합니다만, 네 가지 제언의 상충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저는 경협이나 인적교류를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책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는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경협 등을 통하여 사회적 다원성이 확산되고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장기적으로 북한에 동요가 발생에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체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남한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

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좀 장기적 맥락에서 경험의 논리 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권력승계시기 전망에 관해서는 제가 네 가지 모두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경제계획은 조정기간이 끝난 후에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고, 이는 단순히 조정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단위연합기업소에 관하여 북한의 생산력 발전수준에서는 개체농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소규모 분쟁 가능성은 정책혼선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상의 문제인데, 군사력 강화추세는 상대적 비중증가로 정정하겠습니다.

당국자간 관계의 냉각화와 비당국자간 관계의 제한적 활성화는 전통적인 대남정책이라고 하셨는데, 80년대 말부터 북한 주변의 통일환경이 변했고, 이 변화의 기본논리는 과거의 공세에서부터 그들을 수세로 몰아냈으며 과거의 대남인식과 다른 상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통적인 문제로서만 이야기할 수 없고, 특히 당국자간 관계의 냉각화와 비당국자간 관계의 제한적 활성화는 북한의 전통적 대남정책이 아니고, 당국자도 함께 포함하여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굴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방세력에 대하여 도와준다는 것은 남북간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주면, 개방세력의 북한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고, 보수세력이 강하고 개방세력이 약했을 때 개방세력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성철: 고맙습니다. 이 박사께서는 김정일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산주의체제는 무너지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음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정일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박사께서는 북한에서 전혀 이상기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9절을 평양이 아닌 함흥에서 개최했고 10·10 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유례없이 군사 퍼레이드를 한 점 등 여러 가지 이상 기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의 붕괴, 체제의 붕괴 또는 김정일 리더십의 붕괴 등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특이성-김일성 사후 여러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는 점 등-은 북한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인가를 예측하게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성급한 처방보다는 좀더 지켜보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석: 제가 여기서 발표한 북한 정세 전망은 1~2년 후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 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9·9절을 평양이 아닌 여타의 관련된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선례가 있었습니다.

양성철: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북한관계 현황과 전망

조 민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曹 敏(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I. 序 論
- II. 南北韓關係 現況
- III. 南北韓關係 展望
- IV. 結 論

I. 序 論

- 南北韓關係 概觀 -

해방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어느 때와 달리 남북한관계의 개선·발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남북한관계는 금년 중반기 쌀제공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말았다. 남북한관계의 개선·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말은 분단 50년 동안의 상호불신과 반목의 골이 하루아침에 메워지기엔 너무나 깊고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다.

남북한관계의 視座構造는 ‘상황의 이중성’으로 眺望될 수 있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갈등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현실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평화와 화해·협력 그리고 교류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세계적 조류와는 달리 남북한간의 대결과 상호불신의 구시대적 관행은 여전히 한민족의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북한관계는 갈등·대결 그리고 화해·협력의 두 흐름이 서로 상충하는 와중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과 남북한관계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이러한 ‘상황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인식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여 화해·협력에 바탕을 둔 대북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념적 일체성과 중무장한 병영국가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 속에서 대북유화정책의 한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은 동북아지역의 政治地圖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주변 4국은 북한에 의한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작동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범적 틀에 부응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 4국은 자국 이익중심의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관계의 긴장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 및 현상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민족의 바램과는 무관하게 국제사회는 ‘두 개의 한국’(two-Koreas)

을 통해 북한의 실체에 대한 존재인정을 이미 합의한 상태라 하겠다.

우리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기초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남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아래,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차적인 역점을 두었다. 이와 달리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의 입장과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의 대미·대일관계개선은 그들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대외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미·대일관계개선 구도에서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정책목표로 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간 대화를 거부하고 민간레벨의 접촉·교류를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정책도 분명 우리의 입장과는 조화되기 힘들다.

요컨대 우리의 입장은 「북미·북일관계개선-남북대화」 및 「민간-정부」라는 양 측면에서 양자를 병행시키는 연계정책을 추구해 왔다면, 북한은 전자를 중시하는 즉, 「북미·북일관계」, 「민간」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선택해왔던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간 기본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쉽사리 풀리기 어려운 단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그런데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의 연계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입장도 없지는 않으나,¹⁾ 남북한관계의 교착상태에 대한 근원

1) 정부레벨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간레벨 - 북한체제에서는 '민간' 부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교류·접촉만을 무조건 허용할 수 없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적 책임은 대남 및 대외정책에 있어서 비타협적 원칙만을 고수하는 북한측에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통일여건의 개선에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사회의 안정적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해 남북한 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통일정책에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였다. 금년도의 대북정책에서도 이러한 기본방향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쌀제공을 비롯한 우리의 관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전무한 상태에서 남북한관계 개선의 발전적 계기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대북정책의 신축성이 한층 제한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대북봉쇄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 사이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정책적 혼선을 노정할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국면도 맞이했다.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적 의지와 부단한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으나, 그러한 가운데 핵·경수로문제에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비교적 일관성있게 접근해 간 모습도 보였으며 남북한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한해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금년도 남북한관계의 현황을 사안별로 살펴보고 또한 전망을 모색하는 가운데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대북정책의 실천적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南北韓關係 現況

1. 경수로협상 및 핵문제

가. 경수로 협상

한·미·일을 중심으로 체결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협정문에 한국형경수로가 명기됨으로써, 대북 경수로 지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듯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한국형경수로 거부 입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북한은 제3차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 핵동결 조치의 부분해제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형경수로」 수용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제4차 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 북한은 KEDO와의 공급협정 체결 용의를 표명하고 설계·제작·시공에서 한국의 제한적 참여 등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한국형경수로의 채택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북·미간 경수로 전문가회담은 결렬되었고,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은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목표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미국은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갈루치-강석주간 제네바 고위급회담을 제의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차관보급 회담을 제의하였다.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간에 콜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준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힘겨운 협상끝에 대략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공동언론발표

문에 한국형경수로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형경수로가 제공됨을 우회적으로 명시하였다.²⁾ 둘째, KEDO가 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주계약자 선정과 이에 따른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준고위급회담의 성공적 타결로 경수로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KEDO 사무국 개설후 제1차 KEDO 총회가 개최되어 3개 자문위원회(경수로사업, 대체에너지 공급 및 폐연료봉 처리)가 구성되었다. 9월에 들어와 북한과 KEDO는 팔라렘푸르에서 제1차 공급협상을 개최하였는데, 협상은 전체회의 및 실무급 전문가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후 양측은 실무협상과 함께 10월에 들어와 제2차 고위급회담을 뉴욕에서 진행하였다. 한편, 제1차 KEDO 총회³⁾ 후 신포지역에 대한 부지조사(1차: 8.15~22, 2차: 10.24~11.4)가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를 통해 KEDO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구소련이 지정한 지점이 아닌, 신포 해안지역에서 약 1.5km 쯤 떨어진 지역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한편 부대시설 및 비용상환과 관련하여, 북한은 제3차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 이후 경수로 외에 송·배전망 등 부대시설의 추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제1차 경수로

2) 설립협정문에 한국형경수로 2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KEDO가 노형선정권을 갖는다”, “두개의 냉각재 배관을 가진 1천 메가와트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 및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 중인 개량형” 등의 표현을 의미한다.

3) 1995. 7. 20 개설된 KEDO 사무국은 현재 사무총장 1인(미국), 사무차장 2인(한국, 일본), 사무차장 보좌관(미국)외에 실무진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바, 금년 연말까지 25~30명 규모로 사무국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4) 「朝鮮日報」, 1995. 11. 19.

공급협상에서 북한은 공급협정 초안을 제시하면서 경수로 이외에 10억달러 상당의 부대시설과 자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⁵⁾ 이와 더불어 북한은 공급범위와 관련, 경수로건설에 필요한 하부구조 문제에 관한 KEDO측의 “양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⁶⁾ 북한측의 추가요구에 대해 KEDO는 경수로 건설의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항만, 도로, 송배전시설, 설계도면 등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수로 대금의 상환조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⁷⁾

나. 북한 핵문제

북한 핵문제는 핵활동을 어떻게 동결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IAEA는 대북사찰(1995.9.12~19)을 통해 북한의 동결된 핵시설(5MWe원자로 봉인, 50MWe 및 200MWe의 건설 중단, 방사화학실험실 폐쇄, 핵연료제조시설의 폐쇄)이 IAEA사찰관들의 통제하에 놓여있으며, 동 시설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음을

-
- 5) 북한은 ①부지정리, ②도로, 항만 등 경수로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하부구조, ③경수로 모의운전시설(시뮬레이터), ④송·배전 시설, ⑤500kv용 송전선, ⑥설계도면, ⑦발전소 운전요원 훈련, ⑧5년간 운전에는 필요한 보수·정비 시설 일체, ⑨핵연료 공장, ⑩제1차 재장전 핵연료, ⑪ 기술서적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 6) 북한의 외교부대변인은 1995년 9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원전산업 구축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고, KEDO가 경수로 건설 계획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10월 21일까지 미국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핵개발 계획을 재개할 것임을 위협한 바 있다.
 - 7) 북한은 후연감속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상계와 함께, 경수로 2기 완공후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KEDO는 경수로 1기 완성후 거치기간 없이 15년 분할상환방식을 제시하였다.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IAEA에 의한 사용후연료봉의 플루토늄양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다만 IAEA가 「사용후핵연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⁸⁾

이에 따라 IAEA 제39차 정기총회(9.22)는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찬성 71개국 기권 10개국)을 채택하였다. IAEA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상태 장기화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핵물질보유량에 관해 IAEA에 보고한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사용후연료봉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기술진이 6월 말 1차 방문에 이어 9월초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사용후연료봉(총 8100개)의 안전보관방법에 대해 북한과 협의한 바가 있다.

한편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는 기본합의문 체결 후 3개월내에 5만톤의 중유가 제공되었고 10월까지 제공 예정인 10만톤의 추가 중유도 제공이 이미 완료되었다. 처음 5만톤은 미국방부 예산으로, 나머지 10만 톤중 7만톤에 대한 비용은 미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으로 충당하였고 3만톤에 대한 비용은 KEDO가 부담하였다. 북한에 제공된 중유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대표단이 북한을 방문(95.6.18~23)하여 전용방지감시체제 설치에 대해서 협의하였다.⁹⁾ 앞으로는 매년 50만톤씩의 중유가 제1호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8) 「東亞日報」, 1995. 9. 26.

9) 갈루치 미핵대사는 6월 29일 회견에서 1995년 1월중 북한에 제공된 5만톤의 중유가운데 20%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中央日報」, 1995. 6. 30.

2. 남북대화

한국정부는 금년초(1.25) 광복50주년 경축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차관급회담을 제의하였다. 한국의 제안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던 대민족회의를 신한민족 경축행사로 발전적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제의를 반통일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거부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재개 노력은 끈이어 북한에서 4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평양축전에 이산가족의 참관 및 가족상봉을 허용하도록 제의하였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국자 회담 개최를 촉구하였다(2.3). 특히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이 당국자회담을 수용하는 경우, 이를 북미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인 남북대화 재개요건 충족 상황으로 간주하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북미간 기본합의와 남북대화재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조치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3월로 예정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종교지도자 8인의 방북신청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원은 국제선명회의 대북한 식량지원문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경제협력 조치에 대한 결정은 13인의 기업인에 대해 방북을 허가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특히 남북대화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남북한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원장관이 한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지속적으

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6.15)한 점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능동적이고 신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경직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대남전략 차원에서 ‘단군 추모행사 및 단군릉 참배’와 김일성 사망 1주기를 기념한다는 구실로 남한측 인사를 초청하는 등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⁰⁾

교착상태를 유지해 온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실마리를 찾게된 계기는 북한이 쌀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성사된 6월의 북경회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3차례의 북경회담은 관심사항과 대응자세에서 양자간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낸 회담에 불과했다. 북한은 쌀공급 문제만을 다루기를 원한 반면, 우리측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당국간 대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북한대표 전금철은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함으로써 북경회담이 당국간 대화가 아닌 민간차원의 회담임을 강조하려 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전금철을 북한당국 대표로 간주하고 회담에 임하기로 결정하여, 북경회담을 당국간 대화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였다.

북경회담의 진행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제1차회담(6.17,18)에서 남북한은 쌀제공 규모와 방법에 관해서 주로 논의하였다. 한국은 15만톤의 쌀을 제공하되, 1차로 5만톤을 구상무역 형태로 제공하

10) 북한의 초청에 의하여 정부허가 없이 단군추모행사 참여 및 단군릉 참배 명목의 종교인의 방북, 김일성 1주기에 맞춘 남측인사의 방북, 평양축전에 범민련 남측본부인사의 초청 등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고, 나머지 10만톤은 남북대화 진전속도에 따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북한은 15만톤 모두를 민간기업을 통로로 제공받기 원하였으며, 2-4만톤씩 세분하여 공급할 것을 남한측에 요청함으로써 한국과의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2차회담(7.15~19)은 쌀제공 문제 외에 기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담을 하루 연장하면서, 한국정부는 쌀의 원산지 표시와 대남방송 중지, 86우성호 선원 송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회담의제로 쌀문제와 경협문제만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측의 의제를 거부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제3차회담(9.27)에서는 양자의 본격적인 입장차이가 한층 노정되었다. 한국정부는 쌀제공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족내부문제로 보고 지속적인 협력과정에 연계시키려 한 반면, 북한은 쌀제공문제와 남북한간 대결국면을 구분하려 하였다. 또한 한국은 우성호 선원 송환문제에 대한 북한의 호의적 대응을 기대했으나, 북한은 쌀 추가지원 문제만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남북한은 상호간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회담 일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회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쌀관련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 시도는 지속되었다. 북한의 수해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자 적십자사 및 민간기구(선명회)를 통한 대북지원을 허가함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북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입장도 주목된다. 그러나 쌀제공회담 결렬 이후 남북한 간에는 새로운 대화국면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평화체제를 둘러싼 당

사자 해결원칙 문제는 남북한간에 구체적인 논의 조차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금년도 남북한 당국간 대화에서는 경수로 관련 한국형 원자로 수용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 인정 문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전략 강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 있어서 남북간 당사자 해결원칙 인정 문제 등이 상호 마찰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3. 교류·협력분야 실태

가. 경제분야의 교류·협력

남북한관계의 전반적인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왔는 바,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북·미간 핵문제를 둘러싼 기본합의가 이루어지고 (1994.10.21), 곧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기업인 방북 허용, 위탁가공교역 설비반출 및 기술자 방북 허용, 시범적 경협 허용)를 발표(1994.11.8)함에 따라, 금년도 초반에 들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어느정도 활기를 띠었다. 물자교류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남한 기업인들의 방북과 경제상담이 상당히 진척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위탁가공교역이 올해에도 남북교역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는 가운데,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대북 증유공급과 쌀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은 올해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꼽힌다.

남북한 물자교류 현황을 승인기준 및 통관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남북 물자교류의 총규모는 통관기준으로 1995년 9월말 현재 1947건, 2억2천6백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679건, 1억4천6백만 달러에 비해 54.6% 증가한 수준이다. 남북한간 물자교류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교역이 북한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전년: 9.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 대외경제에서의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특히,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반입이 북한 총수출액의 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전년: 21.0%), 이에 따라 북한 외화가득에서 남한의 반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반출과 반입의 총교류액에서의 비중은 각각 78.0%, 22.0%로서, 여전히 남북교역에서는 반출·입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11) 한국은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1994년도 남북한간 총교역액은 1억 9천만 달러였는데 비해, 금년 상반기에는 이미 1억 6천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1995년도의 총교역액은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9호(1995.7).

<표 1> 남북한 물자교류 승인현황(1988.10~1995.10)

(단위: 천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총반입	위탁가공	총반출	위탁가공	총합계	위탁가공
1988	1,037	-	-	-	1,037	-
1989	22,235	-	69	-	22,304	-
1990	20,354	-	4,731	-	25,085	-
1991	165,996	23	26,176	13	192,172	36
1992	200,685	556	12,818	413	213,503	969
1993	188,528	4,385	10,262	3,611	198,790	7,996
1994	203,521	16,598	25,423	11,966	228,944	28,564
1995. 10	197,394 (160,855)	22,245 (14,023)	62,157 (15,904)	16,328 (10,052)	259,551 (176,759)	38,751 (23,304)
총계	999,750	43,850	141,636	32,331	1,141,386	76,316

()내는 1994년 동기실적임.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52호
(1995.10.1~10.31).

<표 2> 남북한 물자교류 통관현황(1988.10~1995.9)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19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19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19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19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1995.1 ~9	716 (525)	86 (69)	177,329 (135,276)	1,231 (154)	65 (38)	48,619 (10,884)	1,947 (679)	152 (99)	225,948 (146,160)
총계	2,979	-	831,311	1,686	-	92,658	4,665	-	923,969

()내는 1994년 동기실적임. 1995년 수치는 대북 쌀제공을 제외한 것임.¹²⁾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52호 (1995.10.1~10.31).

12) 쌀제공(1995.6~8)을 포함한 대북 반출 총액은 1995년 9월말 현재 281,595 천 달러에 달한다.

위탁가공교역의 현황을 1995년 10월말 현재 승인기준으로 살펴 보면, 총 38,751천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66.3% 증가한 수준이다.¹³⁾ 이와 아울러 남북 경제협력사업도 구체적인 진척도를 나타내 보였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1994.11.8) 이후 투자 및 교류·협력 상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우리 기업은 20여개 사에 달한다. 북한을 방문한 남한의 민간기업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심을 보인 경제협력사업은, 지역별로는 나진·선봉 및 평양·남포 지역에 대한 투자이며, 사업별로는 의류·신발·식음료·전자제품 등에서의 위탁가공교역, 컨벤션센터·통신센터·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부문 투자 등의 광범한 부문에 이른다.

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금년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¹⁴⁾ 금년도 인적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술이 24건에 483명, 문화가 3건에 5명, 종교가 10건에 85명, 체육이 2건에 2명,

13) 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은 주로 셔츠, 바지, 재킷, 스웨터, 코트, 잠바, 장갑, 아크릴사 등이며, 참여기업은 삼성물산(주), 엘지상사, (주)대우, 고합상사, 한일합성섬유, (주)신원 등 19개 회사이다. 이 가운데 엘지상사의 칼라 TV 10대 위탁가공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14) 1991년 89건에 956명, 1992년 37건에 609명, 1993년 216건에 221, 1994년 17건에 210명이었다. 금년도 인적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술이 24건에 483명, 문화가 3건에 5명, 종교가 10건에 85명, 체육이 2건에 2명, 언론·출판이 1건에 3명, 기타가 10건에 48명으로 1995년도 11월 말 현재 총 50건에 626명에 불과한 상태다.

언론·출판이 1건에 3명, 기타가 10건에 48명이다. 몇건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대부분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제3국을 통한 각분야별 접촉들 중에 종교분야 및 학술분야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본 교류실태는 다음과 같다.

종교분야에서는,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주최로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2.5~2.9)에 남한 177명, 북한 53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토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국제협의회」(3.28~31)가 개최되어 남북 종교인들의 접촉이 있었다.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법안스님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철과 북경에서 만나 (4.22) 남북공동법요식 개최문제를 협의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도 북경에서 불교교류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L.A. 에서는 미주한인교회 평화통일희년협의회 제4회 총회(6.26~28)에서 남북기독교인들이 접촉하였다.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재일대한 기독교총회」(10.9~11) 등에서 남북 참석자들간에 접촉이 있었다.

학술분야에서는,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법률가위원회 주최 「정신대문제 국제세미나」(7.3~5) 및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국제핵전쟁예방의사연맹 일본지부 주최 「원폭피해 50주년 일본지부대회」(7.6~9)에서 남북한 참석자간에 접촉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심양 요녕대학에서 개최된 「21세기 동북아」 학술회의(7.16~21)를 계기로 남한(7명), 북한(5명), 해외학자 등이 참석하여 동북아지역 경제발

전과 북한 나진·선봉지역 경제개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한 및 해외 한인학자 통일학술회의」(7.31~8.1)에서는 남한(14명), 북한(6명), 해외동포(6명) 등 총 26명의 관련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학술차원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연길에서 개최된 「Korean 규범문제와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8.3~4), 「동북아시아국제지학심포지움」(8.3~4), 「'95 전자·정보·통신국제학술회의」(8.8~9), 일본 오오사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원시·고대문명의 재검토 학술회의」(8.4~6) 등에서 남북한 학자들간에 접촉이 있었다.

특히,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市에서 열린 「'95 동북아·북태평양 환경포럼」(9.25)은 학술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접촉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북한학자들은 그동안 남북한 관계가 소원한 점을 이용하여 미국과 일본 학계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의 조류·생태·환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던 점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환경·생태학적 보전방안과 관련하여 남북한 학자들이 직접 교류채널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연구해 나갈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에 관한 종합백서의 공동작성을 우리측에 제안하여 1996년 중에 남북한 학자들이 북경에서 다시 모여 공동작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연길에서 개최된 「'95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9.13~16)에서는 남북한 학자 55명(남:35, 북:20)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컴퓨터처리에 대한 학술토론이 있었으며, 독일 아놀드샤인에서 개최된 「독일과 한국: 분단속의 만남, 1945~1995 냉전과 그 이후」 학

슬회의(9.15~17)에 남북한 각 2명이 참석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경에서 개최된 「'95북경 동아시아청소년지도자회의」(10.8~11),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세계관광기구 제 11차 총회」(10.18~22),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 학자회의」(10.20~22)에서도 회의 참석자간에 접촉이 이루어졌다.

핵문제 및 조문문제로 남북한간에 긴장이 고조되었던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금년도에는 대북한 쌀제공이 진행되는 등 중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남북한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에는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직접교류가 확산회 목사의 방북과 쌀 수송선 종업원들의 방북으로 이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여전히 제3국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우성호 납북사건, 쌀수송선 인공기 게양 및 억류 사건, 안승운목사 납치사건 등으로 남북한간의 갈등이 재현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내부결속을 위하여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회피하고 있는 점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인도주의적 사안

가. 이산가족 및 납북자문제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상봉 및 교환

으로 인해 한국 및 외부세계에 북한사회의 실상이 알려지고 개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측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설치나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국내에 설치된 9개의 이산가족 연락센터를 통해 접촉을 시도해 왔으며, 해외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이산가족상봉추진단체를 통해 상봉 및 서신교환을 시도해 왔다. 금년도 이산가족은 285건의 상봉신청을 하여 291건을 승인받았으며, 89건(96명)이 실제 접촉에 성공하였다.

한편 금년도는 우성호 나포와 안승운목사 납북으로 인해 또다시 납북자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과의 제3차 북경쌀회담(9.27~30)에서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동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나. 북한의 인권문제

한국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¹⁵⁾ 「러시아내 탈북 별목공 정착관리 중

15) 제네바에서 열린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1.30~3.10)에서는 남북한의 인권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었으나, 남북한간의 외교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합대책」(1994.5) 및 「북한억류자 관련 종합대책」(1994.9)을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탈북 별목공 국내정착위원회」 및 통일원차관이 주재하는 「북한억류자 실무대책반」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민간단체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1994.12)가 출범하였으며, 민족통일연구원에 「북한인권정보자료센터」가 설치(1994.12)되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AI) 산하의 프랑스, 독일, 필리핀 등 13개국의 50개 인권단체가 북한으로 귀국한 재북조선인 및 일본인의 안부를 우려하는 서한을 북한당국에 발송하였다. 그리고 1994년 7월 북한정치범 수용소 피억류자 명단(남한출신 11명 포함)을 발표하였던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이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 초청으로 1995년 4월 26일에서 5월 3일에 걸쳐 일주일 동안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은 방북허용 및 북한측의 협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조사단의 정기방문 허용 및 개별사례에 대한 추가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고문방지협약에 북한이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7월에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정부의 외무장관은 유엔 50차 총회(9.28) 기조연설을 통하여 북한이 개혁과 사회개방을 통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납북자문제, 이산가족

동 회의에서 한국이 발의한 「아태지역 인권증진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이 결의는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한국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북한은 이산가족의 재회를 막는 것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콩크리트 장벽 때문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인권의 천국이라고 강변하였다.¹⁶⁾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3년 10월 이후 국제적십자사연맹 등 국제민간기구를 통해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과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에 관한 자료 요구 등 역공세를 취해왔다. 올해에도 북한은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등 ‘출소 공산주의자들’(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재북가족들을 북경에 보내 이들과 상기 3인간에 국제전화를 시도(4.9~10)하는 동시에,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 해외 친북단체들을 동원하여 이들의 복송을 위한 국제여론화를 시도하였다.¹⁷⁾ 이것은 한국의 인권실태를 왜곡,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6) 북한의 강변에 대해 이규형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지난해 망명한 시베리아 북한별목공의 수가 60명이며 한국전쟁 이후 남북된 인사가 430명이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17) 한국정부는 출소 공산주의자를 무조건 송환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송환에 대한 북한의 선전공세만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낼 만큼 여유있는 한국의 정치체제를 간접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잠재효과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출소 공산주의자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없이 송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민경일, “김인서·함세환 관련 북한측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향,”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통일원, 1994), 참조.

5.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관계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간 접촉 및 협력실적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정부대표간의 접촉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남북한 정부의 유엔 동시가입(1991.9.17) 이래 양자간 정치·군사관계의 굴절에 관계없이 그나마 꾸준히 국제무대에서 상호접촉을 유지해 온 것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 포럼 뿐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 외에도 남북한 정부대표들은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

18)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일련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국 연길에서 열린 TRADP 통신전문가회의(4.3~5)에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장 등 3명, 북한에서는 최성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과장 등 2명을 포함, 모두 32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사정상 러시아 대표는 불참하였음). 동 회의에서 남북한의 대표들은 두만강 접경지역에 필요한 통신규제 제도와 통신수요 충족방안 등 통신망구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북경 UNDP 계획관리위원회(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PMC) 회의(5.29~6.2)가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 정덕구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정부에서는 모두 7명이 참석하였고 북한측도 수명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개발전략 실천프로그램에 관해 협의하였고, 두만강지역 개발위원회(Commission) 설립에 관한 협정과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 하였다. 그 후 중국 長春에서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한 수송분야 실무회의(10.6~8)가 열렸는데, 동 회의에 남북한 대표 9명(남한: 4, 북한: 5)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참가국 대표들은 두만강 접경지역내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수송분야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 개발에 관해 논의하였다. 최근(12.6) 뉴욕에서 중국·몽골·러시아 및 남북한 5개국 사이의 「협의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설립협정의 체결과 환경양해 각서에 서명하기 위해 회합을 가졌다.

원회(ESCAP) 환경각료회의(11.22~28)와 북서 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실무회의(11.29~12.1)에 참여하였으나, 남북한 대표들간에 있어서 별다른 접촉 및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정부대표들간의 접촉은 대부분 양측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회의에서 우연히 만나 환담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에 불과한 것들이었으며 협력이나 공동보조를 취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여름 북한은 엄청난 수해를 당하여 식량부족에 따른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자 국제적십자사연맹과 유엔 인도지원국(Department of Humanitarian Assistance: DHA) 등 국제기구에 대해 원조를 요청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IFRC)을 통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모포 5,000매를 북한에 제공(11.22)하여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였다. 이것은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대북 간접지원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제무대에서의 두드러진 활동상으로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정당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유엔 및 비동맹 외교에 주력한 사실이다.¹⁹⁾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미

19) 김영남 외교부장은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서신을 발송(7.3)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은 북·미간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주장(10.1)하였다. 또한 10월 18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11차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은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채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부당성과 함께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한 평화체제 전환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공세를 일단 좌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정전기구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편지공세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III. 南北韓關係 展望

1. 경수로협상 및 핵문제 전망

경수로공급협상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비춰볼 때 체결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이다. 북한과 KEDO 양측의 타협과 양보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특히 북한측의 적극적인 입장이 경수로공급협상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KEDO와 북한간의 공급협정 체결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가급적 약화시키면서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준고위급회담에서 제기한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를 놓고 양측간에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미국, 일본 및 각국 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둘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위상 문제이다. 북한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미국기업만을 상대하기 위해 PC의 독립성을 요구한다면, 그 결과 미국기업의 위상과 활동범위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구체적인 비용분담액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보장되었지만, 경수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문제는 한·미·일 3국간에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그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정부에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비용분담율이 70~80%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의 분담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에서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에 제공되는 대체에너지 비용분담 문제도 한·미·일간 새로운 합의사항으로 남아있다.

네째, 남한 기술인력의 불가피한 방북과정에서 북한은 각종 규제를 통해 한국 기술자들의 방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핵동결 및 과거핵의혹 해소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과 IAEA는 이미 사용후핵연료를 인출할 때 이에 대한 사찰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찰은 5년 정도 연기되어 있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유사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할 경우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핵의혹 해소문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조속한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 경수로 지원사업을 남북한관계 개선의 계기와 북한의 핵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수로사업이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경제·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남북간에 경수로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당국에 확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 핵기술자들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활동을 보다 정밀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경수로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곧 북한에 대한 2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과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간 접근은 급속히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본이 가세하면서 북·일간의 수교협상도 조만간 재개되어 양국관계 개선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북한은 경수로 문제와 남북대화 문제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에서 드러났듯이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요컨대 북·미, 북·일 간 관계개선과 남북한관계 개선의 조화문제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다시한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남북대화 전망

남북한 당국간 대화 성사 가능성은 북한의 내부사정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남북한 정상회담은 김정일

의 공식적인 권력승계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안으로, 북한에서 권력구도 변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정일정부의 공식적인 출범 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큰 기대를 모으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북한이 직면하는 대내외의 문제점 - 경제악화, 국제적 고립상태 - 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과 최근 남한사회 내부의 정치부패 및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청산을 둘러싼 정치적 난맥상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한편 남북고위급회담 가능성도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쉽지 않다. 북한 입장으로는 이미 미국과 준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킨 상태에서 남북한간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새로 개최해야 한다는 부담을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정부로서도 현재 한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은 정부·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방향이 남한사회 내부사정에 따라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이 북한의 대남 위장평화공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반정부세력의 활동 강화와 연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관계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1996년 중 공식적 차원에서 남북한 당국간 회담의 성사가능성을 기대하기 어

려운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의 쌀제공을 계기로 이루어진 몇 차례의 회담과 같이, 새해에도 비정기 특별의제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대화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사회의 구조적인 체제모순이 북한의 자력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더욱이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진전여부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관계 개선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당국간 남북대화 가능성이 전혀 무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새해의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 가능성은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남북한 당국은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특사교환이나 사안별 회담을 개최하는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교류·협력분야 전망

우리 정부는 대북 경수로지원과 쌀제공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상에 의거해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대통령 방미시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²⁰⁾ 이는 앞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보다 중·장기적인 전망하에 민족공영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올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20) 박순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민족통일연구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1995. 8. 11),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pp. 79~95.

신뢰회복 및 협력증진의 계기가 마련되어 작금의 남북한 경색국면이 해소된다면,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대북 무역 및 투자장벽 추가완화 조치가 예상되고, 북·일 수교교섭 재개 및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을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한관계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재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²¹⁾ 그리고 실질적 남북경협의 진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인바, 민간기업에게 이미 부여된 일정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주도, 정부지원」의 역할분담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교류·협력 분야와는 달리 북한이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내년도에도 남북한간 사회·문화교류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이 활성화되고, 경수로 지원 사업이 구체화되면 제한적이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사람들이 점증함에 따라 인적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의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실태에서 살펴 보았듯이 북한측이 특히 학술교류 분야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政·經 連繫戰略의 경직화는 남북한관계의 굴절에 따라 경협의 반복 및 속개가 반복될 경우 남북한간 불신만 심화되고, 결국 경협의 진전마저도 불확실해 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연계정책의 해제를 조급하게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대북정책의 전술적 융통성을 제약하기 보다는 묵시적인 실천조치를 통한 해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인도주의적 사안 전망

1996년 중 남북대화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더라도 이산가족문제에서 커다란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 등 제3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원하거나 북한거주 친인척에 대한 송금 및 물품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에도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자료조사 및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인권정보자료센터」를 통해 국내외의 북한인권자료를 종합정리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소개 및 이의 개선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신력있는 국제기구나 단체에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중립적인 시민단체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세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가입·협력하고 있는 유엔 및 국제단체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활용하여 포괄적 대북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규약의 준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구속력 있고 현실성있는 방법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유엔과 비정부차원의 국제민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통해 국제여

른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북한 인권문제를 북·미, 북·일수교와 연계시켜 미국과 일본을 통해 자국의 인권관련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정책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북한 내의 이질적인 사회집단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인권협상에 대비해야 할 단계이다.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출소 공산주의자들의 송환요구에 대응하여 남북자 및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의제로 삼아 정치적 협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재상봉 추진을 위한 비밀거래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동독의 인권 개선에 기여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남북한간에도 인권문제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공개적 협상정책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²²⁾

마지막으로 금년도 남북한관계에서 새롭게 제기된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살펴보자.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현실적인 보장장치로서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으나,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존속과 미국의 확고한 대한 안보공약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의 근본적 변화나 안보위기가 초래되기는 어렵다.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에

22) 김병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06~109.

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중국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²³⁾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당사자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先 평화체제기반 조성, 後 남북평화협정 체결」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²⁴⁾ 나아가 중·장기적 전망에서 남북한관계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대북 설득 및 국제적 지원 유도방안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강구·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結 論

지난 몇년 동안 우리 사회는 통일의 개념 및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에의 맹목적 열정이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자 통일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우

23)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는 한국방문(1995.11.13~17)을 앞둔 기자회견(11.10)에서 한반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언급하였다. 「韓國日報」, 1995. 11. 11.

24) 「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현 정전협정체제를 유지·준수하면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및 정전협정 무효화선언 등 선언적 차원의 공세를 묵살하는 것과 아울러 북한이 대미유인책으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중간조치」를 제의할 경우 한·미 공조체제를 통해 이를 단호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회의적 반응과 통일문제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통일환경의 개선에 있다. 1996년도에도 이러한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에는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기류는 북한을 압박·질식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고립·봉쇄전략은 국제적 공조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따라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합리적·이성적 접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남북한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남전략이 지속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질서의 안정화 노력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북한체제의 상대적 안정 및 국제사회에로의 安着(Soft Landing)을 위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지원·유도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화해와 평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및 경협이 흡수통일정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생존전략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한간 신뢰기반을 쌓아가는 한편, 북한의 자주적 변화·발전에 대한 협력정책의 선언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1996년도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 북·일관계와 남북한관계라는 양자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교류의 확대의

폭 및 시기선택의 문제도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요컨대 「조화와 병행」의 원칙 위에서 「북·미, 북·일관계와 남북한관계», 「정부-민간」레벨 수준의 균형확보의 문제가 여전히 딜렘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현실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남북한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가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합리적인 대북정책과 국민적 정서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확고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북정책의 신축성이 크게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대북 경협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화해·협력조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따라서 1996년도 대북정책은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해외동포를 비롯하여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를 실천적 방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빈 면

제3주제 토론: 통일 및 대북정책

토론자: 김보현(북한문제전문가)

김학성(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양성철: 조민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조박사님 발표에 대한 토론에 앞서 제가 얼마전에 들었던 얘기를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협정 체결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외교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북한측에서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은 차관선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김보현 선생님과 김학성 박사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보현: 발표내용이 상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 사안에 대해 특별히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북한측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약 3가지 정도로 간략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이 통치를 하고는 있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행태를 보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구걸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국제사회에 대해 쌀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방북인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구걸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무장간첩납파, 안목사 납치, 우성호 납치사건 등에서 보듯이 대남적대행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간을 이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시로 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995년도 북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대남강경, 대미유화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남강경정책은 총체적 위기를 긴장을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남강경정책은 당분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위기가 심화되리라고 예상되는 내년에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여 경협에 임하되,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금년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당분간 정상적인 채널을 통한 남북대화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사교환과 같은 한시적인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조민 박사께서 언급하신 대로 경협과 남북대화 연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박사님 글에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부가하여 전망을 한다면, 내년도 북한정세는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 및 경제제재 완화, 북한의 남한 배제 및 한미관계 이간, 남한 총선정국을 이용한 남한내 국론분열 획책, 한반도의 긴

장 고조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여전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성: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일정책의 조급성입니다. 경제적 관계개선을 곧바로 정치 사회적 관계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단기적인 시도는 중장기적 안목과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사회·문화 부문 및 기타 부문에서는 그 성과가 무척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접촉을 통한 성과’는 매우 미약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중심을 단기적인 것에 두어야 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것에 두어야 할지를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일문제의 국민적 합의 기반의 확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민족애의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심리구조를 갖고 있고, 정부는 통일정책의 전략적 이용 및 홍보부족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실패해 왔습니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나 인도적 대북지원 등과 같은 통일원칙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셋째, 남북당사자 해결원칙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국이 경색되면 당사자 해결의 여지는 그만큼 좁아집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북·일,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한미관계가 경색되었는데, 향후 당사자해결 원칙에 따른 북·미, 북·일관

계와 대북관계를 여하히 조절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철: 시간제한을 고려하여 짧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선생님의 말씀은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점들에서 당국자들의 기본적인 대북관은 대단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적극적인 대안 모색은 또 다른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학성박사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변관계를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도 변화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50년동안의 전통적인 우방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會議日程>

- 13:30~13:35 원장 개회사

- 13:35~14:25 제1주제: 주변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 사회: 양성철(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발표: 김국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95년도 동북아정세 평가 및 전망”
 - 토론: 신상진(국제연구실 연구위원)
 전동진(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 14:25~15:15 제2주제: 북한 현황 및 전망
 - 발표: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현황과 전망”
 - 토론: 최수영(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교덕(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 15:15~15:30 Coffee Break

- 15:30~16:30 제3주제: 통일 및 대북정책
 - 발표: 조 민(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남북한관계 현황과 전망”
 - 토론: 김보현(북한문제전문가)
 김학성(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文化정책 比較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軍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變化展望

〈統一政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政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
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
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4-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4-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 ~ 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 ~ 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 ~ 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4 ~ 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한·미 WORKSHOP : US-Koreans Relation at Time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세미나시리즈 95-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